미국 에볼라 의심신고 100여건…감염 공포 확산

확진은 1명…정확한 접촉자 수 파악 안돼 '추측 난무'
아프리카 사망자 3400명 넘어서 통제 불능 우려도

미국에서 에볼라 발병 공포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5일(이하 현지시간) 현재 미국 내 에볼라 환자는 1명 뿐이지만, 발병 의심 신고는 100여 건이 접수됐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치료받던 에볼라 환자들은 퇴원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사망자만 340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미국 에볼라 의심 신고 100여 건에 '예방약' 과대광고까지=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여름 이후 100건 이상의 에볼라 의심 사례를 검토했지만,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텍사스주의 1명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 확진 환자인 라이베리아 출신 토머스 에릭 던컨은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다.

텍사스주에서 첫 미국 내 발병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에볼라 확산 가능성이 우려를 넘어 공포감으로까지 확대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날 뉴저지주 뉴어크 공항에서는 승객 한 명이 구토 증상을 보이자 에볼라 발병이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황급히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워싱턴DC 인근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 역시 에볼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텍사스주의 에볼라 환자 던컨과 접촉했는지를 놓고도 12명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고무줄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미국 업체들이 의약품도 아닌 자사 식품을 '에볼라 예방·치료제'라고 선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급기야 미 식품의약국(FDA)이 이런 과대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한편 라이베리아에서 취재 도중 에볼라에 감염된 NBC 방송의 프리랜서 카메라맨 아쇼카 묵포(33)는 네브래스카 메디컬센터(NMC)의 특별격리 병동에서 치료받을 예정이다.

◇프랑스·독일에서는 환자 퇴원…아프리카는 '통제 불능' 우려=프랑스와 독일에서 치료받던 에볼라 환자들은 모두 완치 상태로 퇴원했다.

여성 간호사인 첫 프랑스인 환자는 자원봉사 활동 중 감염돼 지난달 19일 프랑스로 이송됐고, 프랑스 사회복지부는 전날 이 환자가 "완치된 뒤 퇴원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당국도 지난 8월 독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아온 세네갈 출신 세계보건기구(WHO) 직원이 지난 3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차분한 대응을 보이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아프리카에서는 사망자 수가 3400명을 넘어서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기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생긴 에볼라 환자는 7491명이었다. 세네갈을 뺀 나머지 4개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439명이었다.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경없는의사회(MSF)를 비롯한 여러 구호단체가 활동을 진행 중인 것은 물론, 미국은 군 병력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일부 병력은 이미 아프리카에 도착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의 일선 병원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충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나 국제기구들이 이번 에볼라 발병에 늑장 대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런 목소리들은 지난 8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에볼라 피해자 수와 맞물려 '통제 불능' 우려의 근거가 되고 있다.

1976년 에볼라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의료진 중 한 명이던 런던 열대질병위생대학원의 피터 파이오트 교수는 "에볼라는 더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인류 전체적 차원의 재앙"이라며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가 에볼라를 퇴치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홍콩 시위 대화 국면…내분 조짐도 잇따라

정부 "타협 결렬되면 강제진압 불사"

홍콩 시위가 6일로 9일째를 맞았다. 시위대가 정부청사 봉쇄를 일부 푼 가운데 양측이 대화를 모색하면서 홍콩 시위가 일단 한 고비를 넘긴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측은 대화가 결렬되면 강제진압도 불사하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시위대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화 준비 착수=홍콩 학생 시위대가 5일(현지시간) 정부와 대화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학생회 연합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의 알렉스 차우(周永康) 비서장은 이날 밤 정부청사가 있는 애드미럴티(金鐘)에 모인 시위대에 "경찰이 (안전 보장이라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충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차우 비서장은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행정수반)이 강경한 태도지만 다른 관료들은 대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가능한 한 빨리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화 준비가 타협의 신호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거나 폭력적 진압에 나선다면 대화 준비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레스터 셤(岑敖暉) 학련 부비서장은 라우콩와(劉江華) 정치개혁·본토사무국 부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만나 본격적인 대화를 준비했으며 추가로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개 대학의 학자 80명은 성명서를 배포하고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로 학생들의 호소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시위대 내분 조짐=학생 시위대는 행정장관 판공실과 몽콕(旺角) 등 일부 지역의 점거 해제를 놓고는 시민단체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인 '센트럴을 점령하라'(Occupy Central·이하 센트럴 점령)는 이날 저녁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행정장관 판공실 밖 시위대가 함께 심사숙고한 끝에 입구 봉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며 다시 봉쇄에 나섰다.

행정장관 판공실 봉쇄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참가자의 신분이 경찰인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장관 판공실 밖에는 수십 명이 바리케이드를 다시 설치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또, 센트럴 점령은 몽콕 시위대가 애드미럴티 진영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정부와의 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몽콕 점거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北체육영웅들 '금메달 환향'

인천 아시안게임(AG)에서 종합순위 7위의 좋은 성적을 거둔 북한 선수단이 5일 평양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며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日 온타케 화산 폭발 사망자 51명으로 늘어

호우·태풍 등 악천후로 수색 난항

4일 일본 온타케(御嶽山) 분화 희생자 수색작업에서 심폐정지 상태인 등산객 4명이 새로 발견됐다.

나가노(長野)현 경찰은 이들이 모두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발생한 온타케산 분화로 목숨을 잃은 등산객은 51명으로 늘었다.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위대 등 1000명의 인력을 동원, 13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행방불명자들을 계속 수색하고 있지만 호우 등 계속되는 악천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 열도로 접근 중인 제18호 태풍 판폰 때문에 수색 작업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형 태풍인 판폰은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 중이며 6일 간토(關東) 지방을 근접 통과하거나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中 놀고먹는 관료 16만명 쫓겨났다

사적 이용 관용차도 11만대 퇴출

중국정부가 '놀고먹는 관료'를 뜻하는 이른바 '츠쿵샹'(喫空餉) 16만여 명과 관용차 11만여 대를 퇴출했다고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이 6일 보도했다.

'츠쿵샹'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급료와 수당 등을 받아챙기는 현직 혹은 퇴직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앙당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영도소조 판공실은 최근 관료사회에 대한 대규모 정비작업을 벌여 9월25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6만 2629명의 '츠쿵샹'을 퇴출했다고 밝혔다.

퇴출된 '츠쿵샹'은 허베이(河北)성이 5만57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쓰촨(四川)성(2만8466명), 허난(河南)성(1만5022명) 순이었다.

중앙당 군중노선교육실천영도소조 판공실은 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퇴출된 관용차는 총 11만4418대로, 이는 전국의 각 성(省)과 시(市) 등이 퇴출계획을 밝힌 관용차의 95.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중앙과 지방의 장·차관급을 제외한 공직자들이 일반적인 업무에서 관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온 관용차에 대해 강력한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